

KWDI

해외통신

2021년 5월 (2021.5.1 ~ 5.31)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 제도 개황

곽 서 회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조 및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관련 제도나 정책도 이런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유형 중에서 본 원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초점을 두고 네덜란드의 한부모가족 현황과 제도적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우선 네덜란드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초 기준 18세 이하 340만 명에 가까운 네덜란드 거주 아동·청소년 중 54만 명 가까이 한부모가족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자녀인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9년 13.4%에서 2019년 16%로 증가했다. 참고로 가고 분류 유형 중 결혼한 부모하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62.2%로 가장 높았고, 사실혼인 파트너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19.7%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로 동거하며 살아가는 사실혼 가족의 형태도 한국에 비해 훨씬 흔한 편이다.
- 지역적 분포로 나누어 고려했을 때 격차가 큰 편이었다. 헤이를런(Heerlen)과 로테르담(Rotterdam)은 담당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전체의 약 29%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한부모가족에서 사는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이는 세 명당 한 명꼴 수준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단 4%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89%는 행정상 '모'를 가구주로 하는 가구에 등록된 모자 가족의 형태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CBS(2020.01.23), "Almost 1 in 6 children live in single-parent households", <https://www.cbs.nl/en-gb/news/2019/52/almost-1-in-6-children-live-in-single-parent-households> (접속일: 2021.05.27).
- CBS(2021.02.16) "Labour participation; position in the household", <https://www.cbs.nl/en-gb/figures/detail/82956ENG?q=single-parent#shortTableDescription> (접속일: 2021.05.27)
- DUO(네덜란드 교육문화사회부), "Alleenstaande ouder", <https://duo.nl/particulier/alleenstaande-ouder.jsp> (접속일자: 2021.05.27).
- Gemeente Amsterdam, "Alleenstaande ouder met een bijstandsuitkering - inkomsten en heffingskortingen",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productid=%7B454846C3-1E07-4475-8A01-8AD63A1A5AE1%7D#case_%7B7E7B19FF8-E597-452F-87A0-D0DAFA797716%7D (접속일: 2021.05.27).

경제참여인구에서 한부모가족을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가족(15-74세) 중 노동 인구 및 비노동 인구를 합치면 총 481,000명(남성 101,000명, 여성 380,000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이면서 정규직 근로자인 노동인구는 총 242,000명(남성 54,000명, 여성 189,000명)으로 나타났고 자영업 근로자는 총 52,000명(남성 20,000명, 여성 32,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서는 정규직 또는 자영업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Rijksoverheid (네덜란드 정부), "Hoe hoog is mijn bijstandsuitkering?",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bijstand/vraag-en-antwoord/hoe-hoog-is-mijn-bijstandsuitkering> (접속일: 2021.05.27).

네덜란드에서는 한부모가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Law on Improving Lone Parents' Labour Market Position, Wet verbetering arbeidsmarktpositie alleenstaande ouders)이 제정되어 있다. 본 법의 주요 취지는 한부모의 원활한 자녀 양육 및 노동참여 활성화로, 양육과 경제활동 두 영역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사회부조 수령시 사회부조 수령자가 행해야 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노동시장 참여법(Participation Law, Participatiewet) 일부를 완화 적용 또는 유예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6년간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공부조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혼/사실혼 가구,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혼/사실혼 가구의 경우 보조금 산정 시 소득 심사에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100%를 적용하는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임금의 70%만 적용하고 자녀 복지수당(child budget, kindgebonden budget)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2021년 월 법정 최저임금은 1,684.8유로다(한화 약 228만 7천 원). 자녀 복지수당은 일정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에서 1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월 수령금액은 수입,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된다.

한부모 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보조금을 받는 부 또는 모인 경우, 시간제(part-time)로 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1년 기준 월 최대 220유로(한화 약 29만 8천 원)대에서 최대 6개월 간 임금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세 이하라면 6개월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2021년 1월 기준 최대 137.46유로(한화 약 18만 7천 원) 내에서 최대 30개월간 임금의 1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질병, 임신, 출산 등과 같은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임금의 15%를 공제받으며 2021년 1월 기준 최대 139.41유로 내에서 임금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혜택과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따로 기한 제약이 없어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인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부모 가족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 중인 경우, 교육 지원 명목으로 월 266.52 유로(한화 약 36만 2천 원)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4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학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 보조금인 셈이다.

위에서 살펴봤듯 네덜란드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크게 자녀 양육과 부모의 일·학업 두 분야 모두 고려하고 개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로 정책 방향, 예산, 사회적 맥락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사례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추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 사례도 참고할 만한 것이다.

독일 GERMANY



독일의 한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정책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의 가족 형태 중 한부모 가정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800만 가구 중 약 19%가 한부모 가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의 전체 아동 5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1996년과 2018년 사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130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로 증가했다. 한부모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자녀 1명(56%)을 키우고 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33.3%다. 3명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전체 한부모 가구 중 10.8%였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는 대개 어머니(134만 명)이며, 한부모 가구 중 엄마와 자녀 1명이 살거나(48.3%) 엄마와 자녀 2명이 사는 비율(29.9%)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 가구는 동독 전체 가구의 18.6%를 차지하며 서독에서는 전체 가구의 12%를 이루고 있다. 독일에서 결혼한 부부의 자녀 수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키우는 미성년 자녀 수는 평균 1.74명이었으며 한부모 중 아버지가 키우는 자녀수는 평균 1.33명, 어머니가 키우는 자녀 평균수는 1.4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지키면서 생계 일을 꾸려가는 건 한부모 가정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의 68%가 취업 상태에 있지만, 많은 한부모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2018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약 38%가 사회법 제2법전(Sozialgesetzbuch, SGB II)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약 59만 가구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독일에는 여러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이 있다. 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상황을 돕거나,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양육비/생계비 선지급(Unterhaltsvorschuss)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독일에서는 2017년 7월부터 법 개정예 따라 12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지급 기간 제한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간 12세 이하 아동은 72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이 제한 기간은 폐지됐다.

참고자료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2021.03.23.), “Alleinerziehende nach Geschlecht”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581/alleinerziehende> (접속일: 2021.05.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1.01.18.), “Allein- und getrennt Erziehende fördern und unterstütz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chancen-und-teilhabe-fuer-familien/alleinerziehende> (접속일: 2021.05.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 (접속일: 2021.05.17.)

📌 지금은 12세에서 18세 사이 자녀도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 요건은 사회법 제2법전(SGB II)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법전과 연관된 한쪽 부모 월수입이 최소 600유로(한화 약 78만 원) 정도인 경우이다.

📌 이 정책에 따라 한부모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6세 미만 자녀 월 154유로(한화 약 20만 원), 6세 이하부터 12세 미만 자녀 월 205유로(약 26만 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73유로(약 35만 원)이다. 한부모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아동 최소부양비’ 기준에 따른다. 현재 독일 아동 최소부양비는 6세 미만 자녀 348유로(한화 약 45만 원), 6세 이하 12세 미만 자녀 399유로(약 52만 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 467유로(약 61만 원)이다.

📌 다만 부모 수입에 관계 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이 있어서, 실제 한부모 자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는 아동 최소부양비에서 아동 수당을 공제한 액수다.

*‘아동 수당’(Kindergeld) : 독일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월 219유로(약 29만 원), 셋째 아이 월 225유로(약 31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월 250유로(약 34만 원)를 받는다. 수당은 태어난 시점부터 일반적인 경우만 18세까지 지급되며 만 18세 이후 실업 상태로 구직자인 경우 만 21세까지, 학업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있을 경우에는 만 25세까지 연장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동 부양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 독일에서 2018년 11월에 발표된 ‘가족강화법’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아동과 한부모가정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중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을 확대했다. 정확한 아동 보조금 금액은 소득, 아동 수, 주택 비용 및 아동 연령과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저소득 가정에 자녀당 최대 월 185유로(한화 약 25만 원)를 지급한다.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한동안 아동보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변경 이전에 아동 보조금은 지난 6개월간 부모 또는 파트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며 절차도 복잡했다. 정부의 긴급 지원 조치로 인해 지난 한 달 소득만으로 아동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매월 1일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해당 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 독일 정부는 아동 보조금 외에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버스 및 기차 등 무료 교통 티켓, 무료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 독일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한부모 지원금을 기존 연 1,908유로(한화 약 263만 원)에서 4,008유로(약 552만 원)로 늘렸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자녀부터는 구제 금액이 자녀당 연간 240유로(34만 원)씩 증가한다.

아동보너스(Kinderbonus)

- 독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 지급함과 동시에 ‘아동 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 지급했다. 아동 보너스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 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 보너스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했다(9월 200유로, 10월 100유로 총 300유로). 다만 연 93,000유로(한화 약 1억 2,74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보너스를 받은 아동 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연방 정부는 아동보너스 지급을 위해 43억 유로(약 5조 8,95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2021년에는 5월에 아동 1인당 150유로를 지급했다.
- 이 외에 아이 육아나 돌봄으로 인해 시간제 일을 많이 하는 한부모를 위한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전보다 벌이가 감소한 부부나 파트너에게 최대 14개월까지 현 월급의 약 65~67% 정도를 지급하는 ‘부모휴직 수당’을, 월별 수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받는 것이다. 이 수당은 시간제로 일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부나 파트너 모두 시간제 일을 하면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

김 양 숙 토론토 대학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Fellow)

캐나다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lone-parent family)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은 1976년 289,000가정에서 2014년 698,000가정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Statistics Canada 2015). 이들 한부모 가정 중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1976년 9%에서 2014년 20%로 증가하였으며, 싱글맘 가정의 비율은 2015년 현재 81%로 196년에 비해 그 비중이 5%p 감소하였다. 1976년부터 2014년 사이 싱글맘과 싱글대디 가정이 전반적으로 모두 늘어났으나, 싱글대디 가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1990년대 이후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난 40년간의 추세 중에서 또 다른 특기할 점은 한부모 가정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싱글대디의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싱글맘의 고용률은 48%에서 69%로 증가하였다. 캐나다 통계청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캐나다 정부의 한부모 가정 소득 지원정책을 한부모 가정 고용률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한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캐나다 전체 싱글맘의 69%, 싱글대디의 82%가 고용상태에 있으며, 이는 양부모 가정(여성 75%, 남성 90%) 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빈곤율은 특히나 싱글맘 가정에서 심각한데, 통계청은 캐나다의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싱글맘 가정의 빈곤화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 여성들이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싱글맘들의 경우 이러한 산업에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양부모 가정의 여성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은 1990년대부터 생산적 복지 내지는 워크페어(workfare)식 접근, 즉, 소득을 보조하되 임금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을 취해왔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뉴브런즈윅(New Brunswick)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싱글맘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한 캐나다 자활 프로젝트(Canadian Self-sufficiency Project (SSP))가 그 예인데, 싱글맘들이 (풀타임) 임금노동을 시작할 경우 소득 보조를 해주는 정책이다. 마이클 쉐넌은 이러한 소득 보조 정책이 1990년대 캐나다 싱글맘들의 고용율 신장을 통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Shannon 2009).

참고자료

- British Columbia(2015.09.01.), "Employment supports for single parents on assistance", <https://news.gov.bc.ca/releases/2015SDSI0043-001405> (접속일: 2021.05.19)
- City of Toronto(2020), Affordable Rental Housing Program - Eligibility & Income Verification Guide 2020, <https://www.toronto.ca/community-people/community-partners/social-housing-providers/affordable-housing-operators/affordable-rental-housing-program-eligibility-and-income-verification-guide-for-developers/> (접속일: 2021.05.19)
- CTV News(2021.02.12.), "Dedicated affordable housing to open for single mothers, children in Regent Park this spring", <https://toronto.ctvnews.ca/dedicated-affordable-housing-to-open-for-single-mothers-children-in-regent-park-this-spring-1.5307508> (접속일: 2021.05.19)
- Statistics Canada(2014), "Lone-Parent Families", <https://www150.statcan.gc.ca/n1/pub/75-006-x/2015001/article/14202/parent-eng.htm> (접속일: 2021.05.19)
- The Globe and Mail(2021.01.05.), "Single parents left behind in Canada's labour recovery",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single-parents-left-behind-in-canadas-labour-recovery/> (접속일: 2021.05.19)
- Shannon, Michael(2009). "Canadian lone mother employment rates, policy change and the US welfare reform literature." Applied economics 41(19):2463-81.

비록 지난 몇십 년간 한부모 가정의 고용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빈곤가정 어린이들의 대다수는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이다. 예컨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빈곤층 및 장애인 보조 정책 수급자의 84%가 한부모 가정이다(British Columbia 2015). 싱글맘 가정의 빈곤화 역시 여전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90%가 싱글맘 가정이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싱글맘 가정의 빈곤화를 열악한 여성 노동의 문제에서 진단하고 있다(The Tyee 2020).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자체가 열악한데다가 돌봄의 의무마저 여성에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싱글맘들은 열악한 고용 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 타이(The Tyee)의 보도에 의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최저임금 (2020년 현재 13.85 캐나다 달러)을 받는 임금노동자의 2/3 가량이 여성이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예외적 업종들 (주류 서비스업) 또한 여성화된 업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들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문제가 싱글맘의 빈곤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 The Tyee(2020.01.24),
 "These policies could help end
 single-parent poverty in BC",
<https://thetyee.ca/News/2020/01/24/Policies-End-Single-Parent-Poverty-BC/>
 (접속일: 2021. 05.19)

현재까지도 캐나다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의 큰 틀은 소득을 보조하되 임금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2020년 현재 6세 이하의 자녀가 둘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방정부의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주정부의 세금 혜택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을 통해 연 28,820 캐나다 달러 (약 2,717만 원) 가량을 소득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The Tyee 2020; British Columbia).

90년대의 자활식 프로그램 또한 여전히 유지 중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2015년부터 한부모 고용 이니셔티브(Single Parents Employment Initiative)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이다(British Columbia). 현재 16,000명 이상의 한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한부모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재교육을 위한 학비, 재교육받을 동안 자녀 돌봄에 필요한 비용,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한다. 돌봄 지원은 아동의 나이, 돌봄이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가 19개월 미만의 영아인 자녀를 어린이집과 같이 허가된 형태의 그룹 돌봄 기관에 맡길 경우 최대 월 1,250 캐나다달러(약 117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연령의 영아라도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1,000 달러(약 94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허가된 시설이 아닌 사적으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한 때도 그 비용을 지원한다. 예컨대 19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기 위해 사적으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한 경우에도 주정부가 최대 394달러 (약 37만 원) 를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의 다양한 돌봄 상황에 최대한 맞춰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또한 소득 보조를 계속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에서 최대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인 아이돌봄 분야(Early childhood education), 행정, 의료 서비스, 건설 및 통상 분야가 이에 속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료 후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 후 최초 1년간 자녀 돌봄비를 계속하여 주정부가 지원하여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동산 또한 한부모 가정 관련 정책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측면이다. 캐나다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저소득층이 매달 월세를 내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근년에는 토론토나 밴쿠버 등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평균적인 임금 노동자들에게조차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토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정부와 건설사가 협약을 맺어 시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하여 시가의 80% 또는 60%의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아파트(콘도)를 일정 기간 임대해주는 것이다. 토론토시는 이 정책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한 세대를 할당하고 있는데, 22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22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상태일때에 한해 가능)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참여 가능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싱글맘 가정의 빈곤과 주거 불안이 악화됨에 따라 토론토 우드그린 커뮤니티 서비스(Woodgreen Community Services)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과 합작하여 부실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홈리스 상태인 싱글맘 가정들에게 리젠파크(Regent Park)의 신축 콘도에 34세대를 2021년부터 임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토론토시가 510만 캐나다 달러 (약 47억)를 우드그린에 지원하였고, 방 두 개인 세대의 경우 월 1,270 달러 (약 117만원)로 토론토의 방 두 개 콘도의 평균 월세인 1,896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임대료가 책정되었다.

고용과 복지를 연동한 형태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은 코로나 시국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고용률은 2019년 대비 25% 하락하였다 (The Globe and Mail 2021). 최근 글로브 앤 메일지의 보도로는 작년 팬데믹 동안 실직한 41,000명의 한부모 가정의 부모 중 30,000명은 싱글맘으로, 싱글맘들의 경제적 궁핍은 코로나 시국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하반기 캐나다의 코로나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여는 등 잠시 경제 회복국면에 들어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한부모 가정의 고용률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대로 장기 실업으로 이어졌다. 글로브 앤 메일지는 윌프레드 로리에 대학 경제학과의 타미 쉐리 교수(Tammy Schirle, an economics professor at Wilfrid Laurier University)의 분석을 인용하여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별거나 이혼 가정의 한부모 보다는 비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타격이 지난 1년간 특히 심했음을 보도하였다. 별거나 이혼 가정의 한부모들은 양육비를 공동 부담 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 돌봄에 있어서 가용한 옵션이 더 많다는 것은 팬데믹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비혼 한부모 가정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비공식적 돌봄에 더 의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존의 비공식적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고용 상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팬데믹 동안 심화된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싱글맘들의 빈곤은 고용 중심의 복지정책, 돌봄 정책 없는 여성 고용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의 학계와 시민사회가 돌봄 인프라의 개선 없이 경제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녀를 둔 여성들의 캐나다 평균 고용률이 80%인데 퀘벡주는 85%이다. 또한 퀘벡주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싱글맘 가정의 빈곤율 41.6%에서 21.7%로 낮춘 경험이 있다(The Tyee 2020). 타주에 비해 훨씬 탄탄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돌봄 인프라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정책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는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런던은 전체 가구 중 23.9%, 스코틀랜드는 35.0%가 1인 가구일 정도로 영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먼저 공식 통계를 통해 영국의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현황을 알아보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와 비교해 혼자 사는데 드는 비용을 분석한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코로나19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1인 가구 비중, 지난 2년간 20% 증가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영국 국민은 820만 명으로 20년 전인 2019년(680만 명)에 비해 20.5%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9.5%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이런 증가 추세를 견인한 집단이 45~64세 성인 남성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분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평생 결혼하지 않는 비혼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늦게 결혼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더 어린 배우자를 만나는 경향이 있고, 이혼하면 주로 남성이 혼자 살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의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지역별로 달랐다. 지난 5년간 잉글랜드 남서 지역(South West of England) 23.2%, 북아일랜드 22.5%, 웨일스 22.1%씩 1인 가구 비율이 늘 만큼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와 함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로 따로 살펴보면 영국 평균은 29.5%이지만 스코틀랜드가 35%로 평균 이상을 웃돌았고, 웨일스와 잉글랜드 북동 지역(North East of England)가 각각 32.1%, 요크셔 험버 지역(Yorkshire and The Humber)이 31.6%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대도시인 런던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3.9%로 평균보다 5.6% 포인트나 낮았다.

참고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9.11.15.), "Families and households in the UK: 201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bulletins/familiesandhouseholds/2019> (접속일: 2021.05.27.)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9.04.04.), "The cost of living alone",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articles/thecostoflivingalone/2019-04-04> (접속일: 2021.05.27.)
- GOV.UK(2020.09.09.), "Making a support bubble with another household", <https://www.gov.uk/guidance/making-a-support-bubble-with-another-household> (접속일: 2021.05.27.)
- BBC (2021.01.06.), "Support bubbles: How do they work and who is in yours?", <https://www.bbc.com/news/health-52637354> (접속일: 2021.05.27.)

통계청은 런던의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낮다는 점도 주목했다. 영국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49.1%로 전체의 절반을 육박하지만, 런던은 그 비율이 38.3%로 상대적으로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도시다. 하지만 버밍엄 등 도시가 포함된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 (West Midlands)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1인가구의 54.7%에 달해 런던과 대조를 이룬다. 지역별로 1인 가구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국 통계에서 가족의 개념은 포괄적이다. 통계청은 “자녀 유무를 떠나 결혼, 사실혼 (civil partnered) 또는 동거 (cohabiting)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커플, 자녀가 최소한 한 명이 있는 한부모 가족이 한 주소에 살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멀티 패밀리 가구 (multi-family household)란 두 가족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가구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가족 A와 가족 B가 주방이나 공용 시설을 공유하며 한 주소 아래 살 경우 멀티 패밀리 가구라고 할 수 있다.

- GOV.WALES “Council Tax discounts and reduction”,
<https://gov.wales/council-tax-discounts-and-reduction/living-alone>
 (접속일: 2021.05.27.)

- The London Borough, “Council Tax discounts and exemptions”,
https://www.bromley.gov.uk/info/59/council_tax_-_discount/119/council_tax_discounts_and_exemptions
 (접속일: 2021.05.27.)

영국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 비율

가구 유형	비율
커플 가구	57%
1인 가구	29.5%
한부모 가구	9.7%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2인 이상 성인 가구	2.8%
멀티 패밀리 가구	1.1%

자료 출처: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

런던은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2인 이상 성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19년 기준으로 영국 전체에 이 가구 수는 총 78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8%를 차지하지만, 런던은 전체 가구 중 이 가구의 비율이 6.2% (206,000가구)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커플이나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은 제외되며, 친구 또는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 살거나, 형제자매가 같이 살 때 이 가구 형태로 분류한다. 한국으로 치면 ‘세어 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혼자 사는 비용, 2인 가구보다 비싸

혼자 사는 비용을 분석한 통계도 있다. 영국 통계청이 2019년 4월 발간한 보고서 ‘혼자 사는 비용 (The cost of living alone)’에서 25세 이상 64세 이하 영국 성인 남녀 소비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의 92%를 사용해 2인 가구가 83%를 사용하는 것 비해 소비 비중이 높았다. 가처분 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남아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만큼 1인 가구는 2인 가구보다 씹씹이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월세에 살 가능성이 크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덜 안정적이라고 보여진다”며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사용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 비율도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보다 낮았다.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5~44세 연령대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2인 가구 자가 소유 비율은 67%에 달했지만, 1인 가구는 48%로 19%나 낮았다. 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5~64세 연령대를 봐도 자기 집이 있는 1인 가구는 57%,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는 87%로 격차가 났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는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에 비해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자산을 축적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시대, 1인가구 정책 지원 버블(support bubble)

영국 정부는 영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9월, 지원 버블(support bubble)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버블이란 최대 두 가구를 연결해 봉쇄 기간에도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영국은 봉쇄 기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거나,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버블로 연결된 가구는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새로운 가구와 버블을 형성하고 싶다면, 기존에 연결됐던 가구와 10일간 접촉을 금한 뒤 새 가구와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지원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장애가 있는 가족과 사는 성인, 한 살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가구, 5세 이하 장애아가 있는 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영국 전체 가구 30%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혼자 오랫동안 사회적 접촉 없이 고립돼야 하는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별개로 영국에서 1인 가구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주택 가치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인 카운슬 텍스(Council Tax)를 25% 깎아준다. 영국에서는 single-person discount라고 알려져 있다. 카운슬 텍스를 책정할 때 재산세(property tax)의 50%, 주민세(residential tax)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세 비율 50%는 한 집에 두 명이 산다는 기준 아래에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주민세 비율이 25%로 줄어들며, 17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구, 연령에 상관없이 풀타임 학생과 함께 사는 가구 등도 50%까지 카운슬 텍스를 할인받는다.

영국은 지난 20년간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또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1인 가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영국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지원 버블 같은 정책을 펼친 것은 혼자 오랫동안 사회적 접촉 없이 고립돼야 하는 1인 가구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